



오늘의 주요기사

2023 5 3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江原日報	02	‘ 가 ’					1
강원도민일보	01	가					2
강원도민일보	27	가 " 가 "					2
江原日報	16						3
강원도민일보	04	. ' '					3
江原日報	04	1 2,518 4 3,946					4
강원도민일보	01	.					5
강원도민일보	03	-					6
강원도민일보	03						6
MBC		" "					7
		, 2023					8
江原日報	10						9
江原日報		[]					9
江原日報		[]2023					10
강원도민일보	02	' ' 8 ... '					11
東亞日報	16A	, 500 ‘ ’					11
강원도민일보	04	' '					12
강원도민일보	04						12
江原日報	22	' '					13
江原日報	02	5					14
강원도민일보	02	10 ' 3 ' ...					15
강원도민일보	10	,					15
강원도민일보	21	[]					16
강원도민일보	21	[] ,					17
江原日報	19	[] ~ ,					18
江原日報	19	[]					19



◇가리왕산 케이블카 개장 기념식이 2일 정선 북평면 알파인센터 일원에서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이철규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최승준 정선군수, 김홍규 강릉시장, 심재국 평창군수,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등 기관·단체장과 올림픽 국가정원 범국민추진위원회, 명예군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림픽 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개장

올림픽 국가정원 정선 유치 결의

2018동계올림픽대회의 문화유산인 ‘가리왕산 케이블카 개장 기념식’이 2일 정선 북평면 알파인센터 일원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개장식 참석자들은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통한 올림픽 유산 사후 활용과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이 될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이철규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정선군의회장, 김기철 도의원, 김홍규 강릉시장, 심재국 평창군수,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조창진 G1방송 회장 등 기관·단

체장과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범국민추진위원회, 명예군민, 출향군민회, 주민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기원하는 수건 퍼포먼스를 펼치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향한 의지를 확인하는 이벤트에도 참여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2018동계올림픽 이후 케이블카의 존치와 철거를 놓고 3년여간의 기나긴 투쟁 끝에 ‘3년간 한시 운영 후 재논의’를 결정하고,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갖춘 채 올 1월2일부터 운영돼 왔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선군민들이 피눈물을 흘려 가며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지켜냈다”며 “이제는 가리

왕산에 올림픽 국가정원을 유치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렇게 잘 놓인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2,000억원씩 들여 철거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케이블카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입체적인 국가정원은 단연 정선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있어 최고의 상징으로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정선군민과 강원도민의 희생, 헌신으로 지켜낸 케이블카를 이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문화유산으로 가꿔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김영석기자 kim711125@

강원도민일보

2023 05 03 ()
01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개장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개장 기념식이 2일 가리왕산 케이블카 광장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이철규 국회의원, 최승준 정선군수와 주민, 외지 관광객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관련기사 27면 사진제공=정선군

강원도민일보

2023 05 03 ()
27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개장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 총력”

전국 각계각층 구성 추진위 출범
특별자치도 신성장동력 협력 다짐
인기가수 축하공연 등 기념식 성료

정선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정선군은 2일 북평면 가리왕산 케이블카 광장에서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 기원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개장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개장식에는 최승준 군수를 비롯, 김진태 도지사, 이철규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전영기 정선군의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김홍규 강릉시장, 심재국 평창군수, 전영록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도단위 기관단체장과 지역



정선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지정 퍼포먼스가 2일 가리왕산 케이블카 광장에서 열린 케이블카 개장 기념식에서 도단위 기관장과 지역단체장, 주민, 외지 관광객 등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원도내 주요 사회단체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스포츠, 종교인, 예술문화인들로 구성된 올림픽 국가정원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가리왕산 생태복원을 위해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이 확실한 대안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기념식은 케이블카 성공적 개장에 앞장선 알파인경기장 철거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전영록·박승기·임채혁·김태호·석병기 씨에 대한 감사패 수여, 케이블카 개장 세리머니,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가리왕산 경기장을 조성하는데 2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들었고, 원상 복원하는데 2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복원 예산으로 국가정원을 조성해 국가가 직접 관리, 가리왕산의 친환경적인 개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연계 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 나가는 등 국가정원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할 비용은 있지만 가리왕산 케이블카 철거 비용은 강원도에 한 톨도 없다”며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한달

후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최고 상징으로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올림픽 문화유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정부 예산에 10억원을 반영해 연공유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케이블카 강제 철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국가정원을 통해 문화유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열 도의장은 “가리왕산 국가정원 지정과 케이블카 개장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올림픽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2부 축하공연에는 가수 장민호, 김의영, 문희옥, 윤수현 등이 출연해 지역주민과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유수현

江原日報

2023 05 03 ()
16



소양강댐지사장기 게이트볼대회 제16회 소양강댐지사장기 게이트볼대회가 2일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게이트볼장에서 서흥원 군수,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박귀남 군의장과 선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2023 05 03 ()

강원도민일보

04

강원도·도교육청 '급식 식품비 부담 비율' 이견 평행선

도의회 "교육청이 50% 부담 필요
지자체 대비 예산 여유 고통 분담"
교육청 "교부금 타격에 무리" 난색

강원도내 초·중·고교 급식 식품비 부담 비율을 놓고 강원도를 비롯한 지자체, 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지자체와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 도교육청이 최대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도교육청은 교부금과 연동되는 내국세 세수가 줄고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2024학년도 급식 식품비 부담 비율을 두고 협의 중이다. 현재 학교 급식은 강원도와 시군이 식품비의 4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 20%와 조리실무사 인건비 등 급식 관련 예산은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올해의 경우 식품비 801억 7278만원 중 도와 시군이 각각 320억원씩 총 640억원을 지원하고, 도교육청은 160억원을 부담한다. 다만 도교육청은 인건비 등을 부담, 급식 관련 총예산으로 보면 2165억 977만원 중 교육청 부담은 1459억원으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하지만 강원도의회를 중심으로 이 같은 부담 비율이 재조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원미희 도의원은 지난 3월 열린 본회의에서 신경호 교육감에게 "교육청과 도의 재정건전성 차이를 감안했을 때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묻고 싶다"면서 "도는 한참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차후 도와 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역전된다면 새롭게 협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밝혔다.

당초 도와 도의회 측은 도교육청이 식품비의 50%를 부담하고 도와 지자체가 각각 25%를 부담하는 안을 요구했으나 확정되지 않았다. 지자체가 60%(도 30%·시군 30%)를, 교육청이 40%를 부담하는 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도의 재정상황은 이해하지만 부담비율이 급등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내국세와 연동돼 그동안 세수가 많이 결핍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올해 결핍한 정부 세수가 같은 기간 지난해와 비교해 24조원 가량 적게 결핍하면서 이와 연동된 교부금 규모도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장 2518억원으로 책정된 1회 추경에서도 부족분 1350억원이 발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될 예정이었던 5100억원에서 도교육청이 필요분을 감액해 마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세수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급식 예산이 급증하면 다른 교육활동 추진에 어려

움이 생길 것"이라며 "필요성을 인지해 도와 반영 비율을 논의 중이나 당장 50%로 올릴 경우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원미희 의원은 "도교육청이 기금으로만 1조원 넘게 보유 중"이라며 "지자체와 비교해 도교육청의 상황이 나으니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1회 추경 예산안으로 2518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는 △학력 향상 337억원 △교육복지 및 인성·체력 강화 345억원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 조성 329억원 △각급 학교 공공요금 인상분 76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민엽

江原日報

2023 05 03 ()

04

도교육청 1차 추경 2,518억 늘린 4조3,946억 편성

**당초 예산보다 6.1% 증액
학력 향상 337억 추가 투입**

강원 학생들의 학력 향상 정책에 337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지원 역시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강원 도교육청은 2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강원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규모는 당초 예산(4조1,428억원)보다 2,518억원(6.1%) 증가한 4조3,946억원이다.

우선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제1 공약인 학력 향상 실현을 위해 227억원을 배정했다. 소인수 맞춤형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에 83억원, 학생성장향상도 평가문항 개발 9,400만원, 자기주도학습역량 신장 등 진학지도프로그램 운영 191억원 등이다. 수능형 평가문항 제작 연수, 수학 탐구대회 운영 지원 등에도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편성도 이뤄

졌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으로 각 학교에도 공공요금 폭탄이 쏟아지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요금 여파로 추경 편성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 기본운영비의 5%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 76억원을 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학교 기본운영비를 14%가량 올렸지만 개학 후 냉·난방 비용 등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급식실 환기점검 위탁 용역에 3억8,000만원, 폐암건강검진비 지원 2억3,400만원,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20억원, 학교 전자철관 지원 199억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및 교육비 지원 140억원 등이 추경에 담겼다.

이번 추경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19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원선영기자 haru@

2023 05 03 ()
01

강원도민일보

강원특별자치도 이름·날짜 빼고 아무 것도 없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1일)까지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았다. 강원도가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재탄생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세종특별자치시(2012년)에 이어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는 광역지자체(서울특별시 제외)가 된다. 특자치출범이 가시화됐지만 대내외적 상황이 녹록지 않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작업이 다소 위기에 직면했다.

본지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5월 입법이 본격화된 것과 맞물려 특자치출범 준비 작업 등을 다시 짚어보는 '위기의 강원특별자치도' 시리즈를 신는다.

1. 열기·관심·전략 '3無(무)' 직면

특별자치도 출범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입법 작업, 강원도내 여론 결집 등 양측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열기와 관심 자체가 저조한 것이다.

여기에 정부부처 협의와 국회 입법 전략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와 환경·산림·군사·농업 등 4대 핵심규제 개선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4월 입법'이 불발되면서 다시, '5월 입법'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만약 5월 입법 작업까지 흔들린다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빈 껍데기'로 출범,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야 대선후보의 강원공동공약이었다는 점에서 5월 입법까지 제동이 걸릴 경우엔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

국회 4월 입법 무산 5월 목표

특별법 개정안 조항 규모 관건

정부 부처 내 부정적 기류 여전

도민 여론·관심도 주춤한 상태

해질 전망이다.

도와 도정지원은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각오다. 정부와 여야 지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설득전에 바짝 고삐를 쥐고 있다. 최대 고심은 강특별 개정안에 담길 조항 규모다. 도는 최대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을 비롯한 각 부처의 독자적 권한이 강원도로 이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처 내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정부지원위원회들이 입법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의 최종안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총 131개 조항으로 발의됐다. 그러나 이들 조항을 모두 담기는 어려워 5월 입법 관철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치분권 전문가들은 "꼭 답아야 할 조항은 끝까지 관철시키고, 덜어내야 할 것들은 과감히 덜어내야 한다"고 했다. 강정호(속초)도 의원은 "특자치출범보다 실질적인 개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법도민 여론 결집도 주춤하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등이 전개 중인 온라인 서명엔 현재 1만5900여명만 서명했다.

김순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의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선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모여야 한다. 여론 결집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지은

▶ 관련기사 3면

2023 05 03 ()
03

강원도민일보

손각 다투는 강특법 특례 도-정부 협상테이블 여전히 침묵



공청회 여야 합의 늦어져 미정
정부 타 시도 적용 부담에 신중
일부 조항 조건부 등 수위 낮춰
도·도 정치권 협상력 '시험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특별법에 담긴 특례규정을 둘러싼 강원도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다. 국회 일정상 5월중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주 중 최종안이 나와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지만 여전히 정부와의 협상안은 합구령 속에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조만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합의로 5월의 사일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는 관례대로 '전 세사기 피해특별법' 등 당면현안 처리를 위해 이르면 다음주와 5월말쯤 개최될 공산이 크다. 이 일정대로라면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5월말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다음주중 예상되는 법안공청회에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이전까지 제출돼야 한다.

공청회는 당초 3일 또는 4일 개최가 고려됐지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늦어져 현재까지 미정이다.

강원도의 긴박한 일정과 달리 정부 입장에서선 각종 인허가 권한을 강원도특별자치도에 내줄 경우 전북·충북·경기 등 북부지역 타지되고 있는 타 시도의 특별자치도에도 동일한 권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 여전히 강원도와 협의상에 신중검토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강원도와 도정치권의 협상력이 절실한 이유이다.

이때문에 도는 5월의 국회일정을 감안하면 개정안 원안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보고 강원특별자치도 핵심사업인 과학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중복규제해소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특례조항은 시한제 또는 조건부 권한이 양으로 수위를 낮춰 협상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의 벽'을 넘기 위한 강원도의 양보 수위가 과도하게 낮아질 경우 특별자치도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특별법에 담을 최우선 특례규정을 선별, 정부와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추가 협상을 통해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현·이세훈

2023 05 03 ()
03

강원도민일보

오늘 시도지사협의회 특자도 성공출범 공동결의문 채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한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5월입법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에 힘을 보태기로 해 시너지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17명의 시도지사들은 3일 발표하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자치도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강력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며 "대한민국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특별자치도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각종 규제개선을 시범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

도 성공출범을 통해 지역의 자치분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지방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결의에 나선다.

한편 이번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결의문 채택 작업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제안과 설득으로 이뤄졌다.

앞서 김지사는 지난 4월 6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박지은 pje@kado.net

2023 05 02 ()

MBC

"해운대 같은 땅에 하나님이"..사업자 선정 수 사 착수

정동욱



◀ 앵커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된 건축업자 남 모 씨는 강원도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도했는데요.

남씨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 "해운대 같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식으로 자기 사업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남씨 측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건축 사기꾼으로 지목된 남 모 씨가 진행한 강원도 망상지구의 대규모 개발 사업 부지입니다.

사업주체는 남씨가 대표인 동해이씨티,

모회사인 건설사는 총자산 21억원 규모였지만 6천6백 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남 모 씨(2022년 0000연합 총회)]
"강원도 동해 망상 지구에 해운대 같은 땅에 제가 사업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멘)"

서해에서는 강통 위험이 있는 주택을 전세놓고 동해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남씨는 자신의 개발사업을 홍보하며, 각종 사업에 마치 도움을 받는다는 듯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한다는 취지와 달리 남씨는 9천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고, 인천지역 금융권에서 추가 자금 조달이 끊기자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부지는 경매로 나온 상태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끌어모은 전세보증금이 이곳의 사업자금으로 쓰였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돌려막기가 힘들어지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최재석/강원도의회 의원]
"투자 의향서라고 하나 거기에 실린 자기들의 회사 그러니까 자본금 그 다음에 매출, 종업원 수, 이런 것과 기업 공개 정보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 씨 측은 지난 3월까지도 "망상지구 자산이 2700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을 회유했지만 변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검은 오늘 남씨측 관계자의 건설사와 동해개발사업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미추홀구 전세보증금의 흐름과 남씨 회사의 운영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연결고리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취재:이상용 / 편집:오유림

2023 05 03 ()

동해교육지원청, 2023년도 학교체육진흥지역 위원회 정기 회의 개최

“동해교육지원청, 학교체육 활성화 주요 정책 등 논의”

강명옥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박광서)은 1일(월) 오후 4시 2층 소회의실에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제1차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다.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강원도의회 김기하 도의원(위원장),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교장, 교육 및 체육관련 단체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해 △학교체육 활성화 주요 정책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현황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관련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날 열린 2023학년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2023 강원도소년체육대회 출전 현황 및 결과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현황 △2023년 학교체육 주요 교육활동 추진 일정 △학교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항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홍명표 교육과장은 “위원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학교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江原日報

2023 05 03 ()
10



홍천향교 전통혼례식 홍천향교는 지난 1일 홍천향교 명륜당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이영욱 도의원, 안상호 홍천향교 전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랑 알렉스군과 신부 박진아양의 전통혼례식을 진행했다.

江原日報

2023 05 02 ()

[포토뉴스]홍천군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2023년 홍천군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가 최근 홍천 북방면 공설운동장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회장, 홍성기.이영욱 도의원, 최승주 강원도자율방범연합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 05 02 ()

[포토뉴스] 2023 평창군 농축협 상생한마음 대회



2023년 평창군 농축협 상생한마음대회가 1일 대화면 더위사냥축제장에서 평창농협(조합장:이만재)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한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지광천 최종수 도의원 및 주요 내.외빈과 농·축협 조합장, 조합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5 03 ()
02

‘동해안 지킴이’ 8군단 역사속으로...안보·경제 후폭풍 우려

국방개혁 여파 3군단으로 흡수
임무해제 완료 올 하반기 해체
지역 피해 해결·부지 활용 과제

영동지역을 비롯한 동해안 전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육군 8군단이 올 하반기 해체된다. 육군 8군단은 2017년부터 추진된 ‘국방개혁 2.0’ 계획에 의해 지난 4월 30일부로 임무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수행해 왔던 각종 경계임무와 작전통제 등 기능을 3군단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7년 4월 양양군에 창설된 8군단은 이로써 37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임무해제된 8군단은 6월 말까지는 부대명을 유지하게 되며, 현 군단 사령부에는 양양군 강현면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가 옮겨오게 된다.

예하에 22사단과 23경비여단, 102기갑여단 등으로 구성된 8군단은 동해안 6개 시·군에 이르는 긴 해안을 담당하는 부대로서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내 GP와 GOP 등 전방을 물론,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다.

특히 8군단 예하 22사단의 책임구역은 전방 육상 30km, 해안 70km 등 100km에 달한다. 동해충충부대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던 육군 8군단은 2021년 말 해체될 예정이었으나 예하 22사단에서 ‘철책 귀순·월북’, ‘노크 귀순’, ‘해임 귀순’ 등 경계 실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22년 말까지 이관과 관련한 작업을 마무리했고 이번에 3군단으로 흡수·통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상비병력을 2017년 61만8000명에서 2022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육군은 군단을 8개에서 6개로, 사단은 39개에서 33개로 축소하는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2·20·26·30사단이 해체됐다.

2022년 말에는 ‘이기자 부대’로 널리 알려진 화천 27사단이 해체돼 지역주민들의 아쉬움을 샀다. 국방개혁 2.0은 20세 남성인구가 2021년 29만명, 2035년 23만명, 2040년 13만명 순으로 급감하는 인구 절벽이 도래한다는 추계가 고려됐다. 그러나 8군단 해체에 따른 영동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상존

하고 있다. 육군 8군단은 그동안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큰 행사는 물론 대형 산불과 폭설과 대풍 등 각종 재난 발생시 대국민 지원에 앞장서왔다.

일각에선 8군단이 관할하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체작업을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군단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양양군의 경우 사령부가 3군단으로 통합되면 경계는 물론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시군번영호연합회는 지난해 “경제 취약지역의 인원과 장비는 늘려야 하고 관할 부대역시 강화해야 하지만 국방부는 8군단을 없애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8군단을 존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또 올초 초양양군의회는 “부대가 창설되면서 사령부 인근 273만107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며 “8군단 주변지역의 경우 그동안 사회·경제적 피해를 강요받아 온 만큼 부대가 통합되면 부지는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최훈·조형연

東亞日報

2023 05 03 ()
/ 16A

강원도, 500억 원 규모 ‘양자기술 혁신연구센터’ 유치 도전

도내 기관·대학·기업 24곳 손잡아
과기부 1, 2차 평가 거쳐 8월 확정
차세대 원자력·인공지능·반도체 등
12개 국가전략기술 핵심 거점 구축

강원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연구센터(IRC) 가운데 하나인 ‘양자기술 혁신연구센터’ 공모 사업에 지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으로 공모한 이 사업은 양자정보기

술의 국내 기초연구 핵심 거점 구축을 위해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IRC 사업은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대학의 특성과 분야 연구역량과 인적자원을 지속가능한 연구기관 체계로 집적해 2033년까지 세계적인 대표 연구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양자,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반도체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이 대상이다.

‘양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으로, 이를 활용한 대표적인 분야는 초고속 연산을 할 수 있는 양자컴퓨팅, 도·감청과 해킹 위험을 차단하는 양자통신, 초정밀 계측이 가능한 양

자센서 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모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6월 1차 평가, 7~8월 2차 평가를 거쳐 8월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양자기술 IRC 유치 시 국비 487억 원에 도·시·비·민자별 보태 총 5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양자기술 혁신연구센터 유치를 위해 기관과 대학, 기업 등 24곳이 뜻을 모았다.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한림대를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고려대, 연세대 등에 소속된 양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양자컴퓨팅 개방형 국가연구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국내외 공동 연구 및 자문을 위해 서울대, 성균관대, 고등과학원, IBM 연구자들이 자문그룹으로 참여하고, SKT·IDQ·센시엄, 네이버를 라운드, 테존비즈온, 아이맵, 이와이비 등의 기업들이 양자정보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주관 연구책임자인 한림대 박성수 교수는 양자암호통신을 국내 최초로 구현한 양자분야 전문가로 양자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기술연구단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 국제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원도는 IRC 유치 분위기 조성 및 추진 전략 논의를 위해 16일 한림대에서 ‘양자로 설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이란 주제로 첨단과학 포럼을 연다. 이 포럼에서 김재완 미래양자융합포럼 의장이 기초강연자로 나선다.

앞서 강원도는 2021년 6월 양자기술강원연구소 운영을 시작으로 강원 양자정보기술 자문단 발족,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 양자기술 기초 R&D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그동안 강원도가 무선양자중계플랫폼 공동연구, 국제포럼 개최 등 양자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양자기술 IRC 유치 가능성이 높다”며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호 기자 imlee@donga.com

강원도민일보

2023 05 03 ()
04

‘미시령터널 손실보전 분쟁’ 판정위 개최 합의

도, 미시령측 요구 수용 점점 모색
최소 운영수입보전방식 변경 쟁점

속보=강원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가 100억원이 넘는 손실보전금과 실시협약 변경을 두고 이견(본지 4월 11일자 2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분쟁판정위원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는 미시령도로가 요구한 분쟁판정위원회 개최를 최근 수용했다. 분쟁판정위원회는 양측이 합의한 변호사와 제3자 변호사 총 3인으로 구성되며, 도는 변호사 선임 등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최소운영수입보전방식(MRG) 변경이다. 현재 실시협약은 주 무관청인 강원도가 2036년까지 사업 시행자인 미시령도로에 미시령터널 구간(인제~속초·3.69km) 차량 통행량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해 손실보전금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등 영향으로 교통량이 급감하면서 △2020년 137억원 △2021년 147억원 △2022년 150억원(잠정)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유료도로법 상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 기준과 비교해 70%에 미달할 경우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며 “판정위를 통해 미시령도로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열렸던 분쟁판정위원회는 수익률 조정 등 사업 재구조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미시령도로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선 각하 판단이 나왔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 05 03 ()
04

도교육청 등하굣길交通安全 점검

강원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조성을 위해交通安全 점검을 실시한다.

도교육청과 17개 교육지원청을 비롯해 도내 지자체,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점검반을 구성한다.

점검반은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학생 위치 및 학생주요 통학로 파악 △최근 학교 인근 교통사고 분석 △학교통학로안전성 검토(교통노면 표시·횡단 보도·도로안전시설·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현황) 등을 점검한다. 정민엽 jmy4096@kado.net

늘어난 강원 관광 '체류형'은 제자리



◇지난해 유료관광지 기준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속초해수욕장의 명물인 대관람차(왼쪽 사진부터), 원주 소금산그랜드밸리, 한국관광공사 전경.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분석

지난해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체류형 관광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방문자 수는 1억5,351만명으로, 2021년 보다 17.8%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분위기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방문자 수 기준으로 경기와 서울, 경북, 충북, 인천에 이은 6위에 랭크, 도내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과제로 남았다. 지난해 도내 관광 소비는 22% 증가한 총 1조3,657억원을

지난해 도내 1억5,351명 찾아 전년비 17.8% 증가 소비 22% 늘어 ... 숙박 방문자 비율 0.2% 상승 그쳐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세 이전인 2019년 실적(1조2,172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전체적으로 그래프는 도내 관광산업이 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체류형 관광은 여전히 숙제다.

지난해 숙박 방문자 비율은 0.2% 상승하는 데 그치며 체류시간은 오히려 3.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과 가까운 특성상 '머무는 곳'이 아닌, '당일치기' 내지는 '거쳐 지나가는 곳'으로 여겨지는 셈이다. 지난해 당일치기

관광객이 전체 방문객의 71.6%를 차지했고, 1박은 20.0%, 2박 5.7%, 3박 이상 2.7% 순이다. 숙박 관광객은 여름 휴가철인 7~8월 두달 간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정점에 달했다. 관광 유입이 많은 지역이 경기(42.3%), 서울(29.1%), 인천(5.8%), 충북(5.0%) 순으로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근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관광 프로그램 등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유료관광지 기준 방문객 수는

속초해수욕장이 2,367만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랜드 카지노(2,083만명), 춘천 남이섬(149만명), 양양 낙산사(120만명),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잔도(96만명), 평창 오대산국립공원(월정사 포함 95만명), 원주 소금산그랜드밸리(82만명) 순이다.

인기 관광지로는 속초관광수산물시장과 쓸비치삼척, 홍천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순으로 집계됐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관광객 데이터랩 분석 자료는 각 지역별 관광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데 척도가 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관광객 니즈를 찾아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

레고랜드 코리아리조트(이하 레고랜드)가 오는 5월 개장 1년을 맞는다. 레고랜드는 세계 10번째 개장,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를 타이틀로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각종 멈춤 사고로 인한 안전성 논란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떨어지며 기대감도 빠르게 식어 갔다. 강원일보는 레고랜드의 1년 발자취를 돌아보며 성과와 과제, 지역과의 상생 등을 차례로 보도한다.

불공정 계약 논란 속 멈춤사고 5차례 발생

(상)호평보다 논란 부각

■호평보다 논란 부각=레고랜드는 의암호에 자리한 섬 중도에 39개 축구장(28만여㎡) 면적으로 건립됐다. 레고 브릭으로 지어진 40여개의 놀이기구와 154실 규모의 호텔을 갖췄다. 레고랜드는 멀리사가 2,200억 원, 강원도가 자본을 댄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이 8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도가 800억원에 대한 지분 명목으로 받는 임대료가 3%에 불과하고 도유지를 최장 100년간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드러나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졌다.

강원도의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발표로 인해 국내 채권시장에 충격이 전해졌고 이와 관련된 레고랜드가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또한 고가의 주차료, 편의시설 부족, 휴장 안내 미흡 등 운영 관련 논란이 따라 붙었고 놀이기구가 5차례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우려를 낳았다.

성과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와 춘천시 등은 개장에 앞서 연간 200만명의 방문객(경제효과 5,900억원)을 예상했지만 지난 1년간 입장객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고랜드는 ‘입장객 수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규직 200명과 비정규 계절 근로

고용규모 650명 기대 충족 못해 단체 관람객 3만명 유치 성과도

자 400명을 더한 650명의 고용 규모도 당초 일자리 창출 기대감을 충족 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 상인들이 고대했던 낙수 효과도 체감도는 낮기만 하다.

■개장 효과 커질 수 있을까=물론 레고랜드 개장 효과를 1년 만에 단정짓기는 이르다는 시선도 있다.

레고랜드에 따르면 연간 이용권 구매자의 60%는 춘천 이외 지역 거주자였고 지난해 외국인 5,000여명, 학생 단체관람객 3만여명을 유치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는 외국인 2만여명, 학생 단체관람객 5만여명을 예상하고 있다.

관람객 증가를 위한 운영 및 시설 개선도 추진 중이다. 전 세계 레고랜드 중 처음으로 주말과 공휴일 밤 9시까지 야간 개장을 실시하고 올 7월 9,000여㎡ 규모의 어린이물놀이장을 새롭게 운영한다. 파라솔과 그늘막 설치, 식당 내 한식 메뉴를 추가하며 관람객 불편에 대한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이순규 레고랜드 사장은 “레고랜드에 대한 지역의 높은 기대를 알고 있고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5 03 ()
02

강원 고향사랑 기부금 10억원 돌파 '전국 3위' 시군 편차 심화

올해 1월부터 첫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5개월차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강원도 본청과 18개 시·군의 기부금 총액은 10억원 규모로 집계, 전국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내 18개 시·군 고향사랑기부금 편차는 심화되고 있어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위한 홍보전이 재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고향사랑기부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31일 기준으로 강원도 본청·18개 시군의 고향사랑기부금 총액은 10억643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공개한 기초지

자체 106곳을 제외하고 경북(21억원)과 전북(12억원)에 이어 전국 3위다.

이번 집계액은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시 17개+기초 226개) 가운데 비공개를 요청한 서울·부산 남구 등 107개 광역·기초지자체를 제외하고 산출됐다. 강원도 본청의 고향사랑기부금은

6147만원으로 집계됐다.

도내 18개 시·군 기부금은 철원군(8969만원)이 상위 1위에 올랐다. 이어 △삼척시(7695만원) △홍천군(7577만원) △동해시(7088만원) 등의 순이었다.

기부금 하위 기초지자체는 양양군(1836만원)과 인제군(2789만원)·횡성군(4034만원) 등이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 05 03 ()
10

원주시, 교육지원청 부지 매입 재검토

시, 학성동 개발사업 차질 우려
신청사 부지로 영서고 실습지 제안
도교육청 "옛 학성초 이전안 유지"

숙보=최근 확정된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부지(본지 4월 11일자 4면 등)에 원주시가 제동을 걸었다.

시는 올초 교육청 제안으로 현 교육청 부지와 옛 학성초교 부지 매입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시는 옛 학성초 부지를 학성동 정지철 개발사업 등과 연계, 지역 균형 발전의 축으로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이 원주교육청 이전 부지를 시가 희망하던 영서고 실습부지가 아닌 옛 학성초교로 확정하면서 이 같은 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원주교육청 현 부지 매입을 유보하고 원점

에서의 재검토를 밝혔다. 사실상 교육청이 이전 부지를 영서고 실습지로 재선정하면 현 청사 부지 매입에 다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전 부지 변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계획대로 추진'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현 청사 자체 활용 방안을 수립, 오는 7월 청사 이전안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사 이전이 원주 교육 구성원들의 숙원인 만큼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혜민

강원도민일보

2023 05 03 ()
/ 21

분신 건설노조 임원을 애도하며

-압박수사 여부 점검하고 더 이상 참극 없어야

건설분야노동조합임원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앞에서 분신해 세상을 떠나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분신의 참극이 발생한 날은 국제적인 노동절인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이어서 노동계에 더 큰 심리적 정서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로 일하면서, 강릉·속초·고성·양양지역 동료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에 몸담은 건설노조강원지부 제3지대장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유서에는 노조 활동을 파렴치한 행위로 몰고가는 수사에 대한 자존심 붕괴 등 심정을 피력하고 있기에 무리한 수사였는지 등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근래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분신한 임원은 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분신을 초래한 요인을 다각적으로 규명해 더 이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강릉에서의 분신 사태는 강원도를 넘어 전국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망 당일(5월 2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측은 표적수사 항의 및 대정부 투쟁 결

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행정 조치와 사법계의 수사에 대한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기에 노동계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하락 원인을 노동계 위주로 돌리는데 대한 반감이 적지 않습니다. 학계 전문연구에 따르면 생산성의 높고 낮음은 전적으로 노동자 탓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작용으로 분석됩니다. 노동의 양보다는 질의 문제이고 자본 장비화 정도, 경영자 역량, 조직 문화, 해외의 신기술 유입 속도, 정부의 적재적소 정책 지원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자리가 적은 강원도에서는 고용환경이 불안하고 질 역시 열악합니다. 노동자 임금체불 현상도 심각합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임금체불액은 무려 3만7000여명 노동자의 1700억원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일각에서 노동조합 비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동을 하고도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데도 구제가 쉽지 않고, 최소한의 휴식도 없이 일해야만 생존해갈 수 있는 절박한 현실이므로 형평성을 살피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5 03 ()
/ 21

수도권대 증원, 강원 희생양 우려

-23년 만에 정원 확대... 지역 대학 공동화 가속

정부가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이유로 수도권 대학 정원을 23년 만에 늘렸습니다. 이 정책은 학령 인구 감소와 연계한 지역 대학의 구조조정 논의가 한창이 가운데 결정돼, 대학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긴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교육 공동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기간산업 부재와, 그에 따른 인구 유출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유지됐던 수도권대 정원까지 풀려 지역 불균형이 가속할 전망이다. 비수도권 대학의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도내 대학은 수도권 대입 정원 확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총량을 11만 7145명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일반대학 첨단 분야 및 보건의료 분야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 수도권 정원 규제 해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 입학 정원이 1829명 늘었습니다. 이중 수도권 대학 증원은 서울대 4개 학과 218명을 비롯해 817명에 이릅니다. 1012명이 늘어난 비수도권의 경우 경북대, 전남대, 충북대 등 거점 국립대학이 주

를 이뤘습니다. 도내에서는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75명을 증원, 강원도에 본교를 둔 대학은 증원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번 정책으로 도내 대학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 총 520만 명인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오는 2029년이 되면 425만 명으로 100만 명 가까이 감소합니다. 특히 올해 고3 학생 수는 39만 8271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만 2847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199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된 이래 가장 적은 인원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선발 인원은 4년제와 전문대를 합쳐 51만 명으로 고3 재학생보다 11만 명 많습니다. 지역 대학이 대입 인원 감소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 대학 증원은 지역 대학의 공동화 현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대학은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지역에서 인재가 육성되지 않으면 기업의 성장 기반도 약화합니다. 서울·경기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이 이뤄지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 역시 심화할 전망이다. 대학 정원 조정도 국토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숙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지역 곳곳이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강원도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05 03 ()
/ 19

영월~양구 고속도, 접경·폐광지 회생 위해 추진돼야

영월~양구 강원내륙고속도로(이하 영월~양구 고속도로)는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교통 인프라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다. 정부가 총 사업비 6조5,000억원으로 강원지역 역대 최대 규모의 역사(役事)인 영월~양구 고속도로에 대해 첫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것은 긍정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영월~양구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으며, 정부는 올해 영월~양구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원을 반영했다. 여기에는 최근 용역에 돌입,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 기대를 갖게 한다.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년가량 소

요된다. 양구~인제~홍천~평창~정선~영월 136km를 연결하는 영월~양구 고속도로는 추후 경북 봉화~영양~청송~영천 구간(173km)까지 완공되면 강원 접경지부터 부산까지 직선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국토는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가 균형발전에 큰 장애를 가져왔다.

특히 남북이 군사지역으로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지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작전과 군사시설의 보호를 위해 토지 이용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실시해 왔다. 이로 인해 지역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국토공간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2000년 1월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정해 제도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강원남부권 폐광지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강원남부권은 1960~1970년대 어느 지역보다 활발한 공업지역이었다. 과거 삼척군(현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은 인구 30만명의 전국 제일의 군이었고 막대한 국가 재정 수입을 올리는 곳이었다. 특히 국민의 겨울철 난방 수요인 무연탄과 건설 자재인 시멘트를 공급하

던 당시 국가의 생명줄이었다. 또한 이 지역은 환경 파괴로 신음했다. 정부는 1980년대 국가의 주력 산업 전환과 지역에 대한 무관심으로 현재 이 지역이 생존권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용역 3억원 반영

“도로 등 국가기간 사회간접자본 시설 구축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기능 고려해야”

위기에 내몰려 있는 심각성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해안선의 해변 침식과 어족 자원의 고갈, 삼척·태백·정선의 폐광지역의 고령화·공동화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영월~양구 고속도로 추진은 접경지역과 폐광지역 발전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 운운하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착공에는 난관이 예상된다는데 있다. 도로 등 국가기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은 비용·효과 분석을 뛰어넘어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담보로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그 기반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江原日報

2023 05 03 ()

/ 19

이달 중 국회 통과돼야 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이번 주 중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당대표가 직접 챙기면서 5월 통과에 물꼬가 트였다. 올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이달 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촉박한 시간 속에서 그 첫 단추가 끼워졌다. 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 공청회를 먼저 열기로 하면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던 때다. 더 늦기 전에 전격적으로 심사에 돌입하게 돼 천만다행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기틀인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심사를 위한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강원도와 정치권은 이달 내 공청회에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 말 본회의를 통과하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5단계의 절차 중 단 한 번의 일정 변경만 생겨도 출범 전 통과는 어려워질 수 있다. 개정안에 담긴 4개 핵심규제 해소 특례 등 137개 조문에 대해 강원도와 정부부처 간 의견 차이를 얼마나 좁히고 대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가 달렸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수가 하나라도 나타나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만큼 전체 로

드맵이 무너질 수 있다. 이달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조문이 23개에 불과한 특별자치도로 출범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도에서는 여야 갈등이 없는 '무쟁점 법안'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공동 발의에 나선 만큼 무쟁점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청회 개최 결정이 이뤄진 것은 정치권의 힘이 컸다. 김진태 지사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김교흥·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행안위 여야 간사를 만나 5월 내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허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직접 요청, 이 대표가 김교흥 간사에게 공청회를 조속히 열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도 같은 날 이만희 간사에게 같은 당부를 전하면서 행안위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시작은 바로 지난 100여년간 누적된 강원 지역의 규제 혁파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개정안이 제 모습대로 통과돼야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 나갈 수 있다.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물론 여야 모두 진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